

### 도넬은 악성 댓글 폐해 처벌 수준강화로 대처해야

#### 법조칼럼



문창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문)

최근 가수이자 배우인 젊은 연예인 설리가 악성 인터넷 댓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 이전에도 연예인이나 정치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에 대한 악성 인터넷 댓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설리의 죽음은 더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참고 넘어가거나 형사고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처벌 규정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할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대지방법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적시된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사실을 적시했다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은 댓글 내용으로 판단해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이 적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지만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닌 경우는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니라더라도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 등의 경우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거짓 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처벌의 정도가 매우 낮다.

인터넷 댓글은 유명인에 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연예인 경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기 보다는 욕설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표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하기보다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예인 대한 댓글에 대해 양형 기준을 무시할 수는 없다. 벌금으로 처벌하는 현행 법률을 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설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도넬의 댓글의 경우는 벌금에 그치지보다는 경중을 구별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무차별적 댓글의 폐해는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에 다달았다. 인터넷이라는 익명성에 숨어 무차별적인 공격을 표현의 자유라고 두둔하기에는 상황이 심각하다.

악성 댓글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자정 노력 촉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최근 댓글은 인격 살인에 준하는 수준이다. 젊은 연예인을 죽음으로 몰고간 동료 연예인 추모 글에 "너도 죽고 싶어"라는 댓글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악성 댓글에 대해서는 적어도 폐가망신 할 정도의 가혹한 민사상 처벌이 없이는 젊은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없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더 이상 악플을 인내하기에는 한계를 넘었다. 법적인 처벌 수준 강화와 함께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댓글이 지워지는 기술적 대처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사회기반시설의 미래

#### 기고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인류는 수백만 년을 이어오며 현대문명을 탄생시켰다. 최근 200년은 큰 변화를 거듭했다. 포장도로, 고속철도, 신속 대량수송이 가능한 비행기와 배, 식수와 오수 배관, 스마트 단말기 등의 생활화를 이루었고 그 성능과 재료를 진화시키고 있다.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SF 영화처럼 될 것이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나와, 현재 찾길 위로 층층이 그어진 공간차로를 떠갈 것이다.

고대에도 그 시대를 초월한 특별한 시설이 있었다. 피라미드와 고인돌이다. 통치자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였지만 백성들에겐 삶의 터전이 되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융합되며 새로운 생산을 일으켰다. 또 다른 일이 생겨났다. 오늘날도 다를 게 없다. 특히 인프라(Infrastructure)에 10억 원을 투자하면 13.1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국가는 영토를 관리할 기반을 깔고, 국민은 먹고 사는 일을 하며 경제순환을 돕는 것이다.

그 무대의 최적지가 바로 전남이다. 두 개의 바다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해안을 달리고 싶은 꿈과 바다건너 섬으로 가는 찾길을 소망하는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국고 지원과 지방비 투입이 관건이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그 본보기가 올 4월 개통한 신안 1004대교다. 당초 4차로 또는 4차로 전제 2차로가 검토되었지만, 경제성을 이유로 단순 2차로만 놓게 했다. 예측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연일 바다와 섬을 찾는 차량들로 꽉 차다보니, 응급차량조차 비켜갈 수 없다. 보행자와 자전거는 아예 다니지도 못한다. 조만간에 쌍둥이 다리를 하나 더 뉘어야 할 판이다.

제주도는 어떤가. 옛적엔 육지와 가까운 항구가 주동행로였다. 그 한 곳, 강진 마량은 말을 실어오고 쌀을 싣고 가던 장소였다. 지금은 하늘길로 대체되었다지만 기상상황에 따라 움푹달락 못하곤 한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연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러려면 호남선을 이용해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게 되니 제주와 인천 공항 연결축도 된다. 지금까지 연구를 보면 목포에서 167km (지상 66, 교량 28, 해저터널 73)에 16.8~20.8조원, 설계 포함 공사기간 14년, 서울까지는 520km에 2시간 26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온다. 2007년 전남도에서 처음 제안했지만 유입보다 유출을 걱정하는 제주도민의 우려로 인해 아직 구체화를 못시키고 있다.

언제까지 이르고만 있을 것인가? 세계는 이미 대륙 연결을 시작하지 오래다. 1988년 일본 세이칸터널 53.9km (해저 23), 1994년 영불 유

로터널 50.4km (해저 38), 2000년 덴마크와 스웨덴 외레순드터널 16.4km (해저 4.0), 2010년 거가대교 8.2km (침매터널 3.7)를 개통했고 2021년 예정으로 보령-태안 해저터널 6.9km도 공사 중이다. 이외에도 중국 보하이(渤海)해협 123km와 러시아-미국 베링해협 74km 연결계획도 있다. 해저를 뚫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세이칸터널에서도 그랬다. 1954년 북해도 연락선 침몰로 1천155명이 사망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1년 착공했지만 1976년에 바닷물이 유입되며 전부 유실되는 아픔을 겪었다.

제주 근해 150m 해저 지층은 더 불확실하다. 최소 50m 이상 암반층과 종단기울기 2.5% 이하 확보 과정에서 터널길이가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과감하고 신속한 결정을 하면서 과거 사례와 신기술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사실 제주 고속철도 연결은 1867년 파리세 계막박회에서 공개된 유폴터널 계획에 비하면 많이 늦었다. 더 늦기 전에 국가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해남과 완도를 거쳐 보길도에서 바다 밑으로, 추자도에서 물으로 올랐다가 다시 바다 아래를 뚫는, 차이 나는 투자를 해보는 거다. 진공터널 하이퍼루프를 능가할 판만이 되게 해보자.

시월을 보내는 어느 날, 물고기와 박물관이 살아있는 목포역에서 짐짓을 하고 성산 일출봉을 바라보는 찻집에서 한나절 꿈을 벌써 시작한다. 지난 1일 여수 예술랜드에서 있던 건설기술인 워크숍에서 느낀 소회다. 생각을 나누며 큰 꿈을 그려보는 자리였다. 그 시간을 다시 기억하는 가을이 익어간다. 석양빛도 좋다.

방출도로 확보를 위해서도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장소에는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소방기본법에 의해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 진입을 막는 등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분1초의 시간도 소중함 화재현장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활동을 위해 소화전주변은 비워두는 화재안전을 우리모두 지켜나가도록 하자.

김복수 (보성소방서 예방홍보팀장)

### 사설

#### 전남대병원, 듣도 보도 못한 '품앗이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이 듣도 보도 못한 '품앗이 채용 비리'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국회교육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전남대병원 감사에서 이같은 채용비리를 폭로하면서 지난 수년 동안 적잖은 채용비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품앗이 채용'은 지난해와 올해 전남대병원의 고위직원인 사무국장장과 총무과장의 아들이 각각 최고 점수를 받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지난 2018년 전남대병원 입사 시험에서 총무과장이 면접관이 돼 사무국장 아들을 1등으로 합격시켰고, 올 입사 시험에서는 사무국장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총무과장 아들을 역시 1등으로 합격시키는 '품앗이 채용'을 해왔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막힌 채용비리다. 이게 무슨 입사 시험인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는 '아빠 찬스', '삼촌 찬스'까지 동원한 찬스의 막장 드라마였는데 간부들이 품앗이 면접으로 자녀들을 합격시켰더니 유례없는 취업비리 시키는 '품앗이 채용'을 해왔다는 것이다.

합의로 기가막힌 채용비리다. 이게 무슨 입사 시험인가. 전남대병원 채용비리는 '아빠 찬스', '삼촌 찬스'까지 동원한 찬스의 막장 드라마였는데 간부들이 품앗이 면접으로 자녀들을 합격시켰더니 유례없는 취업비리 시키는 '품앗이 채용'을 해왔다는 것이다.

몰랐다. 더 고약한 것은 채용비리가 수년간 구조적으로 이뤄졌을거라는 의혹이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인연으로 이같은 품앗이 채용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며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 비리 의혹으로 보직을 사퇴한 사무국장장은 교육부 감사 처분 이후에도 수차례 서류·시험·면접관리를 맡아 채용비리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대미문의 채용비리로 병원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 지역의 거점 국립병원 입사 시험에서 총무과장이 면접관이 돼 사무국장 아들을 1등으로 합격시켰고, 올 입사 시험에서는 사무국장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해 총무과장 아들을 역시 1등으로 합격시키는 '품앗이 채용'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제 관심은 경찰 수사에 모아지고 있다. 수사당국은 병원이래는 폐쇄적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병원 내 또 다른 관계자들의 연루 의혹도 마찬가지다. 필기시험 문제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전방위적 수사로 이같은 채용 비리가 두번 다시 발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 날씨 추워지면서 다시 찾아온 미세먼지 대책은

날이 추워지면서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찾아들었다. 대륙의 사베리아 고기압이 확장됨에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된 것이다. 아직까지 한반도와 광주·전남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만 계절이 깊어갈수록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대륙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현재 중국 내륙지역의 사베리아 고기압 세력이 확장하며 중국 동북지역의 미세먼지 띠를 아래로 밀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중국 내륙지방에 축적됐던 미세먼지가 고기압 영향으로 남하해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급증 원인으로 중국내 추수철과 황사 발생이 겹친 때문으로 분석했다. 중국 내륙지역에서 추수를 끝내고 남은 농작물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데다 지난 19일 몽골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도 미세먼지의 양이 크게 늘었다. 미세먼지 가운데 일부가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졌다.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아직은 우려할

만 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해 10월 10일을 전후해 가을철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던 것과 달리 주의보 발령이 늦어지고 있다. 태풍영향에서 발생해 북상 중인 제20호 태풍 '너구리'가 동풍을 형성해 대륙고기압 세력을 일시적으로 막아내고 있는 덕분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 미세먼지의 국내 유입은 시간 문제다. 중국 대륙의 난방 시설 가동 및 자동차 매연에 산업단지인 남동부 지역의 산업단지에서 뿜어내는 배출가스까지 더해지면 지난해와 비슷한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다. 대규모 미세먼지의 유입이 막히는 상황은 한시적이라는 이야기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는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대비해야 한다. 노후 차량 운행 제한이나 차량 2부제, 공사장 조업 단축 및 조업시간 조정 권고 등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시·도민을 통한 지자체와 정부의 방침과 대책에 적극 호응해야 할 일이다. 연례행사가 돼버린 재앙 수준의 미세먼지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 쿠르드족에게 국가는

지난 9일 터키는 '평화의 샘'이라는 작전명의로 시리아 북동부를 공격했다. 그곳에 거주하는 쿠르드족을 몰아내기 위해서였다.

앞서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시리아 철군을 전격 발표했다. 미국은 쿠르드족과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맺어왔다. 특히 최근 4년여동안 시리아에서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함께 싸웠다.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 터키가 예전부터 쿠르드족 공격을 예고했지만, 시리아 주둔 미군이 방패막 역할을 해왔다.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자 쿠르드족은 사실상 미국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미국은 혈맹을 배신했다는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쿠르드족은 이란·이라크·터키·시리아 등에 뿔뿔히 흩어져 있는 세계 최대 유랑 민족이다. 기원전 3세기부터 이 지역의 국경 산악지대에서 유목하며, 고유의 언어와 생활양식을 지키며 살았다. 현재 인구는 3천~4천만명에 이르는데, 이 중 1천500만명이 터키에 살고 있다. 이 때문에 쿠르드족의 독립을 우려하는 터키는 터지지역의 쿠르드족을 경계해 왔다.

쿠르드족은 중세 때 아라비아의 통치를

받은 이후 계속 이민족의 지배를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수차례 독립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주변국의 방해 등으로 실패했다.

특히 쿠르드족은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일원으로 오스만제국(터키 전신)에 대해 싸웠으나 영국의 배신으로 독립을 이루지 못하고 주변 국가로 뿔뿔이 흩어졌다. 이후 터키에 아라라트 공화국, 이란에 마하바드 공화국을 세웠지만 단기간에 멸망했고 이라크와 수차례 싸우며 독립을 추진했으나 주변국의 배신으로 좌절됐다. 이같이 국가의 형태를 갖춘 듯한데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곳은 팔레스타인·캅카스·압하지야·아크웨사스네·소말릴란드 등이 있다. 약소민족의 슬픔이다.

얼마 전 저널리스트 조슈아 키팅의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란 책을 접한 적이 있다. 국가의 체제를 모두 갖추고도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들의 면면을 살펴, 현재의 국가를 표시하는 세계지도가 실상은 깊이 오동치고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우리에게 국가란 존재는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안겨준 책이다. [백지영 정치부장 jkpark@srb.co.kr](mailto:jkpark@srb.co.kr)



약수터

#### 발언대

####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지난 8월 1일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 인상되는 등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기준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32조에는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소방시설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소방시설(소화전, 저수조, 비

상소화장치함 등)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등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소방시설 주변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이상 상향된 데에는 화재 시 소방차량이 소방시설 주변의 차량들로 인해 현장 접근이 어려워 신속한 화재진압을 하지 못하는 데 따른 조치이다. 화재는 초기진압이 중요한 만큼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출동중인 소방자동차의 소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 10일 창간 1988년 4월 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 회장 조덕선 사장 발행·편집인 장인근 주필 김영태 편집국장 강동준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재봉로 324(중흥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대표전화 (062) 606-7700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치부 (062)606-7730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22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원 | 독자재보 062-606-7722·FAX 062-606-8765 | E-mail mdilbo@srb.co.kr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사랑방 뉴스를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